

중국 대출금리 기준 변경(新 LPR)에 따른 현지 반응과 시사점

(19. 9. 2)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I. '新 LPR1' 도입 의도와 향후 방향성

□ 新 LPR 도입으로, '현재 대출 기준금리' 대비 '10bp 하락'

- 인민은행은 '19.8.20자 新 LPR 시행 후, 만기 1년 LPR은 4.25%, 5년 이상은 4.85%로 고시함. 이는 현재 대출 기준금리(인민은행 고시)와 기존 LPR 대비 각각 10bp 및 6bp 하락한 수치임.

※ '만기 1년 미만', '1년 초과 5년 미만' 대출금리 결정은 '1년' 및 '5년 이상' 금리수준을 참고하여 각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함.

□ '통화정책 실효성 강화'를 통한 '금리시장화 초석' 마련

- 주요 의도는 ① 통화정책 실효성(효과성) 강화, ② 금리시장화 제고 (통화정책 전도체계 개선 등), ③ 중소(영세민영)기업(小微企业)의 융자난 및 고비용 부담²⁾ 해소, ④ 경제성장의 안정적 운용 등에 있음.

- 특히 新 LPR는 시장화 및 정책성 금리인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1년 만기)에 연동됨. 이는 정부 주도로 대출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간 괴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음.

1) LPR(Loan Prime Rate, 贷款市场报价利率, 대출시장우대금리)로 구체적인 계산방식 등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산출 방식	상세 내용	참여 은행	고시 시점
기존 LPR	상업은행 고시금리 X (1+상하변동배수)	담보, 기간, 이율변동 등을 고려하여, 10개 은행이 호가금리 산출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등 총 10개	매일 오전 11:30
新 LPR	MLF + SP = [중기유동성대출금리= 공개시장조작금리= 무위험금리] + 스프레드(최고·최저 호가 제외 산술평균값)	① MLF(인민은행, 금리 및 자금규모 결정권 보유)는 만기 3개월, 6개월, 1년 중 '1년 만기' 금리에 연동 ② SP는 자본비용, 위험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18개 은행이 호가금리 산출 (전국은행간 자금증개센터가 취합)	총 18개 은행(기존 10개 은행에 도시 농촌 외자 민영은행 각 2개씩 추가)	매월 20일 오전 9:30

2) 최근까지 중국 정부는 금융리스크 조기 관리를 위해 off-balance(은행이 그림자금융 등에 투입한 자금) 통제를 강화해 옴. 이는 중소기업 융자난 및 고비용(All in Cost 기준 최소 8~12% 수준) 문제 심화의 원인이 됨. 이에 교통은행은 금번 조치가 그림자금융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량 중소형기업 또는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 고비용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앞 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함.

< 중국 대출금리 제도 변천사 및 향후 방향 >

구분	제도	세부 내용	특이 사항
'13.7월	인민은행 대출기준금리	1년 6.00%, 5년 이상 6.55% 대출금리 하한선 폐지(7.20일자)	금리시장화 목적,
'13.10월	LPR 최초 도입	1년 5.71%(10.20일자)	LPR 조작빈도 높음
'15.10월	인민은행 대출기준금리 ,LPR 공존	1년 4.35%, 5년 이상 4.90%(10.24일자, 25bp 인하) 예금금리 상한선 폐지(10.24일자) LPR 만기 1년 4.30%(10.26일자, 최초 대비 141bp 하락)	LPR 시장민감도 낮음, LPR 활용가치 유명무실화
'18.4월	LPR 금리 1차례 인상	LPR 만기 1년 4.31%(4.8일자, 3년간 1회 변동) ⇒ 전체 시장 은행권 LPR 활용비중 2%에 불과	
'19.8.20	'新 LPR' 도입	1년 4.25%, 5년 이상 4.85% 1년 미만, 1년 초과 5년 미만 : 은행 재량	통화정책 실효성 강화
향 후 방 향	'新 LPR' 역할 강화	(단기) MLF 추가 조정(인하) 가능성 높음 (중기) 점진적 금리시장화 작업 지속(수신금리 자유화 등) (장기) 금리 시장화 및 일원화(兩軌一軌) 달성	금리시장화, 일원화 달성

자료: 인민은행(통화집행보고서, '19년 15호 공고 등), 언론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 **향후 점진적인 방식으로 '금리일원화 달성' 지속 추진**

- 정부는 금리 시장화를 단계별(점진적)로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① MLF 추가 조정을 중단기적으로 검토할 것임. 아울러 기존 선진국들의 금리 시장화 이후 금융리스크 발생 사례를 참고해, ② 대출 기준금리 폐지, ③ 수신 기준금리 자유화 등은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임.

- 실례로 미국은 '80년 금리시장화 개혁 후, 5년 내 저축은행 도산 위기를 겪음. 일본도 금리 시장화 이후 은행간 경쟁 격화로 '90년에 자산가격이 붕괴됨. 독일과 영국은 시장화에 15년을 소요함.³⁾

3) 한국은행 북경 사무소 자료('19.8월) 중 관련 내용 발췌

II. 현지 반응(정부·언론⁴⁾ 및 현지 금융기관⁵⁾ 중심 기술)

1. 정부 및 언론

□ [정부] 금리시장화 발판 마련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

- (내부반응) 인민은행은 금번 제도가 금리시장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봄. 특히 중소 영세·민영기업(小微企业) 앞 용자난 해소와 고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제조업 투자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19.8.28일자 인민은행 창구(구두)지시에 따르면, 중국계 은행은 9월부터 신규대출의 30%(외국계 제외), 10월부터는 외국계 은행을 포함하여 50%에 新 LPR을 적용해야 함. 내년부터는 모든 은행이 80%로 확대해야 함.
- *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창구지시 가능성도 있어, 사전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新 LPR' 도입에 따른 '현지 반응' >

구분	내부반응 ¹⁾	수익성영향 ¹⁾	대응전략 ²⁾		
			규정 정비	전산 구축·변경	신규기업 발굴
정부·언론	긍정적	중립적	-		
중국계 은행	중립적		진행중		계획중
한국계 은행	다소 부정적		진행중	계획중	
일본계 은행	다소 부정적	중립적	진행중		계획중

주: 1) 내부반응, 수익성영향을 긍정적, 중립적, 다소 부정적, 부정적 4단계로 구분

2) 자체 대응전략 수립단계를 기완료, 진행중, 계획중, 미수립 4단계로 구분

자료: 표본조사 형식의 면담(방문 3건 및 유선통화 5건)을 실시하여, 질적평가 방식으로 분석·정리한 것으로 '단순 참고용' 자료임을 강조함.

4) 인민은행 공식 발표자료 및 第一财经 등 주요 언론사 기사 및 사설 등을 참고하여 정리

5) 현지 금융기관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면담(방문 및 유선통화) 표본조사 방식을 7일간(영업일 기준, '19.8.20~28) 실시함. 구체적으로, 중국계는 교통은행, 상해푸둥발전은행 2개 은행(정보제공자 보호 목적으로 소속 및 성함은 생략), 한국계는 4개 은행(정보제공자 보호 목적으로 명칭 생략), 일본계는 1개 은행 및 1개 컨설팅기업(정보제공자 보호 목적으로 명칭 생략) 앞 면담(방문 3건 및 유선통화 5건 실시)을 실시하여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함.

- (수익성영향) 新 LPR은 급진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임. 오히려 중소기업 용자난 해소와 함께 중소기업의 신규 자금 수요를 확대하여, 은행권 수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봄.
- (위안화가치) 동 조치는 금리시장화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위안화가치 하락 유도와는 무관함. 즉 중소기업 앞 원활한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향후 방향성) 중국 정부는 과거 선진국이 금리시장화 과정에서 겪었던 금융위기 사례를 주시하고 있음. 이 때문에 개혁 속도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
- 이에 금번 LPR이 변동성이 높은 DR007, 역RP금리 등에 연동하는 대신, 1년 만기 MLF를 사용한 것임. 금융리스크로 전이되는 현상을 철저히 관리*하며 금리시장화를 추진할 계획임.

* 은행별 LPR 적용 실태 및 대출금리 경쟁행위를 MPA(거시건전성 평가)에 포함

□ [언론] 정부의 '금리결정 통제권 강화'로 금리시장화 진전 기대

- (주요반응) 제일재경 신문 등은 금번 조치가 정부의 금리결정 통제권을 강화하여 금리시장화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해석함. 아울러 TMLF (목표중기유동성대출창구) 등의 수단을 통해 선택적 금리인하를 추진 중으로, 향후 1년 만기 MLF금리 하향 가능성이 높음.
- 구체적으로 인민은행은 18개 은행의 호가 결정체계의 적정성을 감독할 수는 있어도 호가 자체를 통제할 수 없음. 이에 LPR을 MLF에 연동하여 통화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수익성영향) 신규 대출건에 대한 LPR 적용 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다만 재대출건 등에 대한 LPR 추가 적용 시, 특히 중소형 은행은 예대마진 축소에 따라 수익 부담이 클 것임.
- (정책효과성) 금리인하가 대기업의 조달비용을 감소시켜, 대출금리 실질 하한선을 제거할 것임. 그러나 고위험 중소기업은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용자난, 고비용 부담이 지속될 수도 있음.

2. 현지 금융기관

□ [중국계] 수익성 영향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방안 적극 모색

- (내부반응) 교통은행, 상해포발은행(이하 '포발은행')은 이미 올해 1분기에 '新 LPR' 하반기 도입을 예상함. 이에 내부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며 계약서 수정,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 등을 추진 중임.
 - 교통은행 관계자는 금번 조치에 따른 금리 하락폭이 10bp로 폭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함. 그러나 지난 4년간 변동폭이 1bp인 점을 고려 시, 정부의 정책의지가 크고 향후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함.
 - (수익성영향) 교통은행은 수익성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국유·대형상업 은행은 수익구조가 예대금리 차이에만 의존하지 않아, 수익성 확대전략을 수립해 향후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고 봄.
 - 수익구조 측면에서 중국은행은 외자기업, 공상은행은 다수 고객층과 상품 다각화, 농업은행은 2~3선 도시고객층, 교통은행은 리스사업과 국유기업 채권투자, 푸파은행은 투자상품에 특화됨.
 - 아울러 초상은행은 개인 카드고객, 건설은행은 부동산투자에 특화되어, 은행별 수익구조에 따라 수익성 영향은 차별적일 것임.
 - (대응전략) 포발은행은 현재 재무구조 분석 방법, 특히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체계화 중임. 이는 중소기업 앞 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임.
 - 공신력 있는 국내외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특히, 비재무적(주주배경 평가를 강조)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부의 중소기업 앞 대출요구에 사전 대응한다는 방침임.
- ※ 상기 은행 모두 8월 30일까지 '新 LPR 대응전략 내부방안' 수립 완료
- (정책지속성) 상기 은행 모두는 新 LPR 대출금리가 최소 6개월~1년은 유사한 수준 또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봄. 특히 하반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MLF 추가 조정을 예상함.

- **[한국계]** 일부 은행의 수익성 저하 예상, 관련 규정 재정비 추진 중
 - (내부반응) A, B, C, D은행 모두 내부적으로 동 정책의 영향을 다소 부정적으로 봄. 제도 관련 세부지침이 명시화되지 않아 모호하며, 관리감독도 추가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 실제로 기존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월 1회 보고해 왔는데, 향후 주 1회 보고하는 형식으로 변경됨. 이는 은행권 수익구조 및 동향 점검을 기존 대비 강화한 것으로 관리감독에 따른 부담이 증대됨.
 - (수익성영향) 수익구조가 대부분 예대금리 차이에 의존하고 있음. 이에 LPR 적용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수익성 제고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실제로 8.28자 인민은행은 외자은행 앞 동 제도 설명회를 통해, 신규 대출건 외에도 기승인·미집행건에 대해서도 LPR 적용을 요구함. 이에 재약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함.
 - 아울러 당장 10월부터 신규 대출의 50%에 대해 新 LPR을 적용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80%를 적용해야 함.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비중 기준이 창구지시 형태로 신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대응전략) 중국 내 본사, 한국계 은행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수립을 검토 중에 있음.
 - (모기지론) 인민은행이 모기지론 금리를 LPR을 참고하도록 지시함. 상해 한국계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아 LPR 적용 시, 역마진 발생으로 금리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 **[일본계]** 최초 예상과 달리 다소 혼란, 대응전략 수립에 고심

- (내부반응) E은행은 중국계 은행과 같이 연초부터 하반기 도입을 예상함. 이에 내부 규정 수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최근 업무가 신속히 진행 중임. 다만 기획부서와 실무부서간 대상 기업, 시점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다소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수익성영향) 은행 내부적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봄. 다만 중국계 은행은 외국계 대비 수익구조가 다양하고 정부 정책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외국계의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대응전략) 인민은행 지침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우선 신규 대출건에만 '新 LPR'를 적용한다는 방침임. 이후 인민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E은행은 8월 30일까지 '新 LPR 대응전략 방안' 수립 완료키로 했으나, 기획부서와 실무부서간 의견조율 등으로 9월 초 마무리 예상
- (정책효과성) F컨설팅사는 금번 제도는 금리시장화의 중장기적인 효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봄. 그러나 은행간 금리경쟁이 심화될 시, 중소은행의 도산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일부 중소기업은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함.
 - 특히 금리경쟁은 지방 중소형 은행의 순이자마진 축소를 야기하여, 수신 금리를 무리하게 올리도록 유인함. 이에 재무구조 및 영업 악화 등으로 경영압박과 금융리스크(도산 등)를 야기할 수도 있음.
 - 한편 대기업, 소기업(스타트업 포함) 앞 융자가 용이해 지고, 비용이 감소할 것임. 그러나 고위험 중소기업(양호한 기술력, 일시적 재무난) 앞 대출심사가 더욱 엄격해져 융자난과 고비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음.

III. 애로사항(중국 진출 한국계 금융기관 중심 기술)

① LPR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으로,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 가중

- 도입 초기, 신규 대출 건에 대해 新 LPR를 적용기로 함. 8.28자에는 창구지시를 통해 기승인·미집행건도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추가 비용도 부담 요인임.
- 향후 LPR의 점진적인 인하와 함께 범위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음. 중국계는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비교적 순응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 이는 한국계 은행의 중장기 수익에 다소 부정적임.

② 신규 기업 발굴 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애로

- 현재 신규 기업 발굴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임. 그러나 중국계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지표 신뢰성은 물론, 비재무적 요소 파악의 한계로 신용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 한편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 회계사 등의 보수는 높은 수준임. 더욱이 비재무적 요소 평가 시, 컨설팅 회사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규 승인 관련 소모비용이 다소 부담임.
- 이외에도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 현지인력 확충이 필요함. 다만 급여수준 부담, 빈번한 이직률 등은 장애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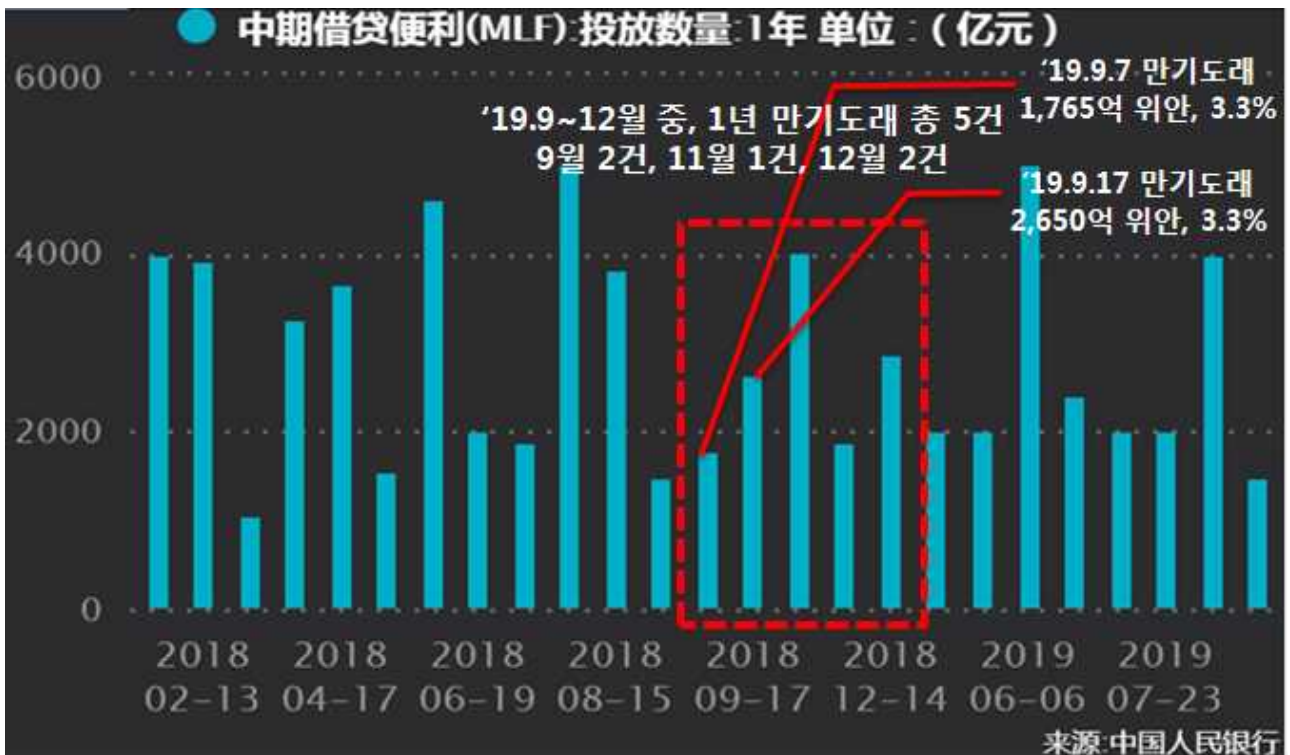
③ LPR 제도 관련 불확실성으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

- 당초 예상과 달리 기승인·미집행 건에 대해서도 新 LPR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생기는 등 제도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비교적 높음. 이는 향후 선제적인 대응전략 수립에 장애요소임.

IV. 평가 및 시사점

- **[평가 1]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해 '점진적인 금리시장화' 조치 예상**
 - 금번 조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운용을 위한 금리시장화 초기 단계로, 여전히 시장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봄.
 - 이는 정부가 초기 시장화 단계에서 급진적 경제성장 촉진보다는 발생 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를 중시한다는 의미임.
 - 이에 급격한 LPR 조정보다는 점진적 방향으로 동 제도를 운용해 나갈 가능성이 큼. 하반기 거시경제, 중소기업 융자난 등을 고려하여, 인민은행 통제권 하에 있는 MLF를 추후 조정할 것임.
 - 실제로 '19.8.20일 이후 1년 만기 대출금리가 4.25%를 기록 중이나, 9월 7일과 17일에 MLF 2건(아래 그림 참조)이 만기도래함.
 - 이에 MLF를 추가 조정할지 주시해야 함. 이후 매월 20일 18개 은행의 호가(SP)를 반영한 LPR이 고시가 되므로 변동성을 지켜보아야 함.

< '18~'19년 중 MLF 1년 만기 자금규모 추이 >



자료: WIND 및 중국인민은행

□ **[평가2]** '新 LPR' 정책효과성에 대한 견해차 존재

- 은행권 수익성, 중소기업 용자난 등에 관한 인민은행과 현지 반응간 시각차가 존재함. 이에 향후 정책추진 시, 중소기업 앞 용자난 등이 실제 해소되는지 실증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찰이 필요함.

□ **[평가3]** 단기수익성 저하 '은행별 차별적', '중장기적 타격 불가피'

- 금번 조치로 단기적인 수익성 저하는 은행별로 차별적이나, 예대금리 의존형 수익구조를 가진 은행은 다소 부정적임.
- 중장기적으로 대출금리의 점진적 인하, LPR 활용 여부 등에 대한 감독 강화로 수익성 제고방안 없이는 타격이 불가피함.

⇒ 다만 다소 긍정적인 점은 동 제도가 금리시장화 초기단계로 대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있음. 이에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구사 필요

□ **[시시점1]** 인민은행을 포함한 국유은행 등과 '밀착형 관계' 강화

- LPR 제도방향 예측,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민은행(국유은행 등 포함)과의 관계 강화는 필수임.
- 이를 통해 관련 핵심정보를 사전에 취득하는 한편,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함.

□ **[시시점2]** '점조직형 대응'보다 한국계간 '공동대응 플랫폼' 구축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규정 재정립, 전산시스템 개선 등과 함께 향후 신규 중소기업 발굴, 인재 채용 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한국계 은행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 플랫폼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본계 E은행만 하더라도 조사분석 인력만 100여 명에 육박하며, 중국계는 당연히 이를 넘어서는 수준임. 이에 '점조직형' 대응은 사실 명백히 불리한 전략임.

- 실제로 신규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요소 평가에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평가 분석체계 마련을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연락처 : 070-7525-0857)